

‘독립국가’라는 사고실험과 신생국의 존속 조건

— 이노우에 히사시 · 고종석 · 안정효의 분리 독립 서사

임 태 훈*

요약

이 연구는 분리 독립을 상상한 세 소설에서 신생국이 존속을 도모하면서 마주하는 제도적 제약을 비교한다. 이노우에 히사시(井上ひさし)의 『吉里吉里人』(1981), 고종석의 『우리 고장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2008), 안정효의 『역사소설 출섬』(2012)이 그 대상이다. 세 편은 형식과 시간 폭이 다르지만, 어느 지역이 기존 국가에서 떨어져 나와 나라를 세우는 분리 독립 서사라는 출발점을 공유한다. 비교 범주는 외부의 승인을 얻고 영토를 지키는 정치·군사 제도, 재원을 조달하고 배분하는 경제 제도, 공적 언어에 대한 접근 지위를 정하는 공용어 제도다. 키리키리국은 국제법 논쟁에서 이기고도 41시간 만에 소멸한다. 황송공화국은 영토에 대한 법적 권원이 불분명한데도 미국의 승인을 얻지만 해일에 잠긴다. 제주공화국은 승인과 통치 능력을 갖추고 기축통화 질서의 금융 거점이 되어 20여 년간 존속한다. 이처럼 다른 결말이 제도적 차이에서 곧바로 도출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 나라는 모두 대외 경제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독립 이후 마련한 제도를 통해 특정 집단을 새롭게 분리한 지위에 놓는다. 이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배제의 재생산’으로 개념화한다. 미국의 개입 방식은 작품마다 다르지만, 미국이 주도한 지정학적·경제적 질서 바깥의 독립은 세 작품 어디에도 없다. 그 질서에서 가장 불편한 결말은 파국이 아니라 존속이다.

주제어: 지정학적 SF, 분리 독립 서사, 배제의 재생산, 공용어, 이노우에 히사시, 고종석, 안정효

*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목차

1. ‘독립국가’의 상상은 언제 되풀이되는가
2. 국가의 탄생, 선언과 승인 사이에서
3. 변기와 금반지, 축적은 종속과 배제를 없앨 수 있는가
4. 새 국어는 누구를 언어적 소수자로 만들까
5. 존속의 조건, 배제의 재생산

1. ‘독립국가’의 상상은 언제 되풀이되는가

동아시아의 주권 질서와 영토 구획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거듭 바뀌었다. 청나라(大清國)는 1895년 시모노세키조약에 따라 대만을 일본에 할양했다. 한반도는 1945년 38도선을 기준으로 미국과 소련의 점령 구역으로 나뉘었고, 1948년 남북에 별도의 국가가 수립되면서 분단이 굳어졌다. 한국과 일본의 작가들은 그 구획을 한 번 더 고치는 상상을 되풀이해 왔다. 중앙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따로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다.

1981년 일본에서 이노우에 히사시(井上ひさし)는 도호쿠의 농민 4,200명이 마을을 독립국으로 선포하고 이들을 버티는 소설 『吉里吉里人』을 펴냈다.¹⁾ 벼 재배 면적을 줄이라는 감반(減反) 명령에 대한 저항이 독립의 동기였다. 2008년 겨울의 한국에서 고종석은 제주가 독립전쟁과 강대국의 승인을 거쳐 독립국으로 20여 년간 존속하는 미래를 가상역사 「우리 고장에서선 그렇게 말하지 않아」로 그렸다.²⁾ 독립된 제주는 1948년 제주

1) 이 연구는 『吉里吉里人』의 한글 표기를 ‘키리키리’로 통일한다. 외래어 표기법의 원칙은 ‘기리키리’이나, 동음 반복의 청각 효과와 어감의 희극성을 표기의 근거로 든 김태경의 선례를 따른다. 김태경, 「자본주의 너머를 상상하다 — 이노우에 히사시 『키리키리인』의 가능성과 한계—, 『일어일문학연구』 111집, 한국일어일문학회, 2019, 197면. 이하 『吉里吉里人』의 인용은 신초문고 개판본(2016)의 권과 면수를 괄호에 표시한다.

2) 이 작품은 계간 『대산문화』 2008년 겨울호에 처음 발표됐고 고종석 선집 1권 『플루트의 골짜기』(알마, 2013)에 수록됐다. 이하 인용은 그 판면의 면수만 괄호에 표시한다.

4·3 사건의 제노사이드 이후로 대한연방공화국과의 역사적 연계에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여긴다. 2012년의 안정효는 핵폐기장 소동에 휘말렸던 서해의 외딴섬이 용기해 나라가 됐다가 물속으로 사라지기까지를 전 3권의 장편 『역사소설 술섬』으로 썼다.³⁾

1981년 일본에서는 1970년부터 전국 규모로 시행된 쌀 생산조정인 감반 정책에 더해 행정개혁과 재정 긴축이 잇따랐다.⁴⁾ 도호쿠의 농민은 논을 놀리고 살림을 줄이는 방식으로 그 비용을 떠안았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에 지방의회와 단체장 직선으로 지방자치가 부활한 뒤에도, 군사기지와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국책사업의 결정권을 중앙정부가 그대로 쥐었다. 지역을 동원하는 수단은 행정 명령에서 경제적 보상과 개발 약속, 주민투표로 바뀌었지만, 국가는 농촌과 섬에 생산조정과 안보, 폐기물 부담을 계속 집중했다.

세 작가는 중앙정부가 생산조정·안보·폐기 부담을 집중한 주변 지역에 독립국을 설정했다. 다만 건국 주체는 다르다. 키리키리와 제주의 주민은 중앙정부에서 분리되지만, 주민의 집단 의사와 무관하게 관료·재벌·미국 대사가 황송을 설계한다. 독립 이전에 세 지역이 떠맡는 몫부터 다르다. 도호쿠는 감반 명령이 정한 생산조정의 영토다. 제주는 4·3 학살과 해군기지 논쟁이 겹쳐 있는 안보의 영토이고, 술섬은 핵폐기장 후보지로 지목된 폐기물 처리지다. 그런데 주변 지역에 세워진 신생국들도 독립 이후 다른 집단을 밀어낸다. 새 공용어를 쓰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나라에서 외국인 취급을 받고, 황송의 원주민은 외교 행정적 필요성에 따라 국적을 얻고 잃는다. 독립 이후의 제도가 다른 집단을 새롭게 불리한 지

3) 안정효는 2008년 인터뷰에서 술섬을 대학 시절부터 평생 준비한 소재라 밝혔다. 김두호, 「생애 최대의 작품 탈고 앞둔 소설가 안정효」, 『인터뷰365』, 2008년 10월 24일.

4) 일본의 쌀 생산조정은 1969년 ‘稲作転換パイロット事業’으로 시범 실시되었고, 1970년 ‘米生産調整’과 함께 전국 규모로 시행됐다. 1970년 조치는 그해 쌀 150만 톤을 줄이는 전국 단위 정책이었다. 伊藤順一, 「転作の地域間調整と農家経済」, 『農業総合研究』 48巻3号, 農林水産省農業総合研究所, 1994, 5-6면.

위에 놓는 과정을 이 연구는 배제의 재생산으로 부른다.

세 나라는 외부 승인을 얻고 영토를 지키는 정치·군사 제도, 재원을 조달하고 토지·자산·노동을 배분하는 경제 제도, 공적 언어에 대한 접근 지위를 정하는 공용어 제도를 마련한다. 승인 체계는 국가와 비국가의 경계를 정하고, 재정과 화폐는 부와 부담의 몫을 정한다. 국어 정책은 국민 내부에서 공적 언어에 접근할 수 있는 화자와 그렇지 못한 화자를 나눈다. 국제법이 정한 국가 요건에 공용어는 들어 있지 않다.⁵⁾ 이 연구는 국가 일반의 요건이 아니라 세 편이 이 세 제도를 함께 다뤘다는 사실을 근거로 승인·재정·공용어를 비교 범주로 삼는다.

세 편은 소극(笑劇) 장편과 여행 연대기, 가상역사 단편으로 형식이 저마다 다르고 상호 영향 관계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세 편을 함께 놓을 까닭이 있다. 셋이 나온 삼십 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국가와 주변 지역의 관계가 같은 방향으로 달라졌다. 미국은 냉전이 끝난 뒤에도 지역 안보 구조를 유지했고, 일본과 한국은 발전국가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 규율과 재정 책임을 지방과 개인에 떠넘겼다. 신생국의 헌법과 화폐와 군대와 국어까지 상세히 다룬다는 공통점도 세 편에서 확인된다.

세 작품에 대한 학술적 관심은 고르지 않다. 안정효의 『하얀전쟁』을 다룬 연구로는 이경재의 논의가 있다.⁶⁾ 『吉里吉里人』에는 1981년의 문예시평 이래 쌓인 일본 쪽 논의와, 국내 연구인 김태경의 두 논문(2019, 2021)이 있다. 이 연구는 고종석의 단편과 선행 논의가 거의 없는 『솔섬』

5) 세 작가는 요건과 무관하게 국어 정책을 국가 성립의 절차로 부각했다. 키리키리국은 국어 교본을 파내 방언을 국어로 올리고(상권 120-124면), 제주공화국은 개헌과 국민투표로 공용어를 바꾸고(461면, 472면), 황송공화국은 한국어를 영어로 대체하는 20년 교육계획을 내세웠다(3권 185면). 이 연구는 세 작가가 국어를 승인·재정과 나란히 건국 과업으로 다뤘기에 공용어를 세 번째 범주에 넣었다. 『역사소설 솔섬』의 인용은 나남판(2012)의 권과 면수를 표시하고, 이하 『솔섬』으로 줄인다.

6) 이경재, 「한국소설에 나타난 베트남전 기억의 변모 양상—안정효의 『하얀전쟁』 개작양상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64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35-69면.

을 함께 다루면서, 김태경이 『吉里吉里人』에서 분석한 우연성의 정치가 두 한국 작품에서도 나타나는지 검토한다.

일본 연구자들은 『吉里吉里人』에서 국가론에 집중했다. 다카다 지나미(1995)는 일본국 헌법 제22조의 국적 이탈 자유를 근거로 삼아 키리키리국의 독립을 국민국가 제도를 향한 ‘목숨 건 놀이’로 읽었고, 타자가 없는 마을 국가에서도 권력이 생겨난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토퍼 로빈스(1998)는 건국 과정과 주체성 상실을, 헌법학자 히구치 요이치(2013)는 개인들이 목적을 세워 창설한 국가라는 성격을 검토했다. 가토 지히로(2017)는 토머스 모어와 조너선 스위프트의 계보에 이 소설을 놓았고, 뉴루야오(牛路遥, 2019)는 키리키리국이 국가 제도를 차례로 갖추고도 완성된 국가가 되지 못하는 구조를 분석했다.⁷⁾ 그러나 승인과 재정, 국어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 나라가 어떤 조건에서 버티는지를 분석한 논의는 확인되지 않는다.

세 소설은 강대국의 승인과 군사기지와 영토의 전략적 용도를 국가 존속의 조건으로 다룬다. 여기서 존속 조건은 결말을 결정한 충분조건이 아니다. 신생국이 존속을 도모하면서 갖추거나 상대해야 하는 제도적 제약을 뜻한다. 필자는 앞선 연구에서 이러한 서사를 지정학적 SF로 규정했

7) 일본 연구사의 서지 정보는 다음과 같다. 高田知波, 「国家・国民・命がけの『ゲーム』一井上ひさし『吉里吉里人』をめぐる」, 『日本文学』44巻11号, 日本文学協会, 1995, 47-59면; Christopher A. Robins, 「研究発表『吉里吉里人』における国家形成と主体性の喪失」, 『国際日本文学研究集会会議録』21号, 国文学研究資料館, 1998, 69-80면; 樋口陽一, 「『講演』ある劇作家と共に〈憲法〉を考える一井上ひさし『吉里吉里人』から『ムサン』まで」, 『早稲田法学』88巻1号, 早稲田大学法学会, 2013, 255-268면; 加藤千博, 「井上ひさし『吉里吉里人』に見るユートピア文学の伝統—トマス・モアとジョナサン・スウィフトとの比較から」, 『比較文化研究』128号, 日本比較文化学会, 2017, 49-63면; 牛路遥, 「『成る』可能性のない国家—一井上ひさし『吉里吉里人』論」, 『立教大学日本文学』121号, 立教大学日本文学会, 2019, 410-427면; 초기 논의로는 松崎晴夫, 「文芸時評」(『文化評論』247号, 新日本出版社, 1981, 143-152면)과 前田愛, 「『吉里吉里人』論」(『國文學—解釈と教材の研究』27巻4号, 學燈社, 1982, 98-106면)이 있다.

다. “열강들의 패권 구도와 영토의 제약에 근거하여, 다가올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전쟁, 국내외 안보 위기, 그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동을 상상”하는 서사이고, 최인훈과 이문열과 고종석의 한반도 서사가 그 계보에 든다.⁸⁾ 같은 논문은 지정학이 일국(一國)의 경계 안에 갇혀 사고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이유에서, 비교문학적 접근을 다음 과제로 명시했다. 이 연구는 그 제안을 이어받아 일본의 『吉里吉里人』을 비교에 넣고, 공용어 제도를 세 번째 범주로 더한다.

지정학적 SF 가운데 한 지역이 기존 국가에서 떨어져 나와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를 이 연구는 ‘분리 독립 서사’로 부른다. 상상은 영토의 분할에서 시작하고, 새로 생긴 나라는 승인과 재원, 국어를 처음부터 마련해야 한다. 소극과 역행 연대기, 가상역사 단편이라는 형식은 작품마다 다르고 이틀, 전 생애, 20여 년 등의 작중 시간 폭도 다르지만, 출발점만큼은 같다. 그 출발점을 기준으로 삼아, 이 연구는 세 편을 함께 분석한다.

세 작가는 현실의 영토 구획을 먼저 바꾸고, 신생국이 마주하는 승인·재정·언어 제도의 재료는 현실에서 가져왔다. 이노우에는 도호쿠의 한 마을을 일본에서 떼어 냈고, 안정효는 서해에 없던 섬을 만들어 냈고, 고종석은 제주를 한반도에서 잘라 냈다. 세 작가는 현실의 영토 구획을 고정된 조건이 아니라 조작 가능한 변수로 삼았다. 이 조작이 외삽법이다. 알려진 값의 바깥을 기존 추세로 추정하는 수학의 기법을 SF 작가들은 역사에 옮겨, 현실의 조건들에서 가장 그럴듯한 인과의 연쇄를 골라 가능한 역사와 다가올 미래를 추론한다. 선행 연구는 그 가운데 실패한 사건의 성공을 가정해 그 뒤의 역사를 다시 전개하는 조작에 주목했다.⁹⁾ 외삽의

8) 임태훈, 「지정학적 SF 연구를 위한 시론」, 『반교어문연구』 63집, 반교어문학회, 2023, 82면. 비교문학적 접근의 예고는 같은 글 110면. 이 논문은 최인훈과 이문열과 고종석의 작품을 지정학적 SF의 계보로 검토했다.

9) 외삽법의 정의는 임태훈, 「한국 SF가 ‘80년 광주’를 이야기하는 방법」, 『대중서사연구』 30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24, 56면. “역사 속에서 ‘常數’로 굳어진 실패한 사건을 ‘變數’로 재인식하고, 성공을 가정해서 그 후의 역사를 전개하는 방법이다.” 관찰값의 어법은 임태훈, 「지정

재료는 정책 갈등만이 아니다. 이노우에는 평화헌법과 금본위제의 폐기를, 안정효는 외환위기 직후의 금 모으기를, 고종석은 영어 공용화 논쟁과 동북아 금융 허브 구상까지 끌어왔다.

이들과 전 생애, 20여 년이라는 세 시간 폭은 신생국의 수명이면서 세 작가가 고른 관찰 단계다. 배제는 건국의 순간에 생기고, 나라가 존속하는 동안 제도가 된다. 세 작품을 함께 읽으면 건국 직후의 제도 형성, 건국에서 소멸까지의 통치 과정, 독립 20여 년 뒤의 일상화된 질서를 서로 다른 시간 규모에서 비교할 수 있다. 세 작품이 설정한 신생국의 존속 시간은 서로 다르며, 관찰 범위가 다르면 초점도 달라진다. 이노우에는 국가 형식 일체를 한꺼번에 연기해야 하는 선언의 시간을, 안정효는 건국 제도가 세습되고 부패하고 무너지는 상속의 시간을, 고종석은 독립이 예외 사건에서 일상 질서로 정착한 정상화의 시간을 다뤘다.

시기가 달라도 세 나라가 부딪히는 제도는 같다. 승인과 재정과 국어다. 국제법 논쟁에서 우위를 점한 나라는 왜 이를 만에 소멸하고, 영토에 대한 법적 권원이 불분명한 나라는 왜 강대국의 승인을 받는가. 금 약 4만 톤을 번기로 주조한 나라와 국민의 금반지로 영토 대금을 갚는 나라에서, 축적은 대외 종속과 내부 배제를 없앨 수 있는가. 방언을 국어의 지위로 끌어올린 나라와 국어를 바꾼 나라와 한국어를 영어로 대체하려던 나라에서, 주변 언어가 공용어로 제도화될 때 새로운 언어적 소수자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어느 작품에서도 신생국은 배제 없이 국가가 되지 못한다. 사라진 두 나라는 물론이고 살아남은 한 나라도 마찬가지다.

학적 SF와 상상력의 구조 변동: 1987-1994년의 대체역사소설에 관하여, 『반교어문연구』 68집, 반교어문학회, 2024, 186면. 외삽법은 관찰값(직접 체험한 역사, 공식적 역사 서술)에 근거해 관찰 범위 밖의 경로를 예측하는 기법으로 정의된다.

2. 국가의 탄생, 선언과 승인 사이에서

세 작품에서 강대국은 주변 영토의 영유보다 전략적 용도를 우선한다. 고종석과 안정효 소설의 승인 협상에서 흥정되는 것은 전부 그 용도다. 1981년 5월의 미일 정상 공동성명은 두 나라 관계를 ‘동맹관계’로 명기(明記)했다. 스즈키 젠코 총리는 방미 중에 일본 방위력 정비의 목표로 ‘일본 주변 수백 해리, 항로대 약 1,000해리’를 거론했다.¹⁰⁾ 동맹이 새로 정한 것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 일본이 말을 역할이었다. 한국에서는 2006년부터 2012년 사이에 평택 기지 확장과 대추리 사태, 제주 해군기지 건설 결정과 강정마을 갈등, 한미 FTA와 쇠고기 협상의 검역 주권 논쟁이 잇따랐다. 안정효의 『술섬』에서 미국 대사 매컬럼이 원하는 것도 중국 견제용 해군기지이고, 고종석은 해군기지 논쟁의 실제 현장인 제주를 독립국으로 삼았다. 서로 다른 시기에 나온 세 편은 같은 것을 묻는다. 국가는 선언으로 태어나는가, 승인으로 태어나는가.¹¹⁾

독립을 선언하는 나라에는 아직 자기 제도가 없다. 주민들은 선언을 실행할 문서 양식과 절차를 지배국에서 빌려 온다. 『吉里吉里人』에서는 독립 한 시간 만에 입국 경비관을 자칭하는 사내가 열차 승객들에게 여권을 요구하고, 뒷주머니의 『간약육법(簡約六法)』을 꺼내 출입국관리령 제3조

10) 1981년 5월 8일 미일 정상 공동성명 제1항은 두 나라 관계를 “日米兩國間の同盟關係”로 명기했다. 정상 공동성명이 이 표현을 쓴 것은 1954년 요시다·아이젠하워 성명 이래 처음이다(「第94回国会 参議院 本会議」 第17号, 1981年5月13日, 寺田熊雄 発言). 스즈키 총리의 ‘일본 주변 수백 해리, 항로대 약 1,000해리’ 발언은 같은 날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이 아니라 질의응답에서 나왔다(「第96回国会 衆議院 外務委員会」 第2号, 1982年3月19日, 浅尾新一郎 発言). 공동성명 원문은 外務省 編, 『わが外交の近況』 第26号(昭和57年版), 大蔵省印刷局, 1982, 465-468면.

11) 국가 승인론에는 국가의 요건을 갖추면 타국의 승인과 무관하게 국가가 존재한다고 보는 선언설과, 기존 국가들이 승인해야 국제법적 지위가 생긴다고 보는 구성설이 대립한다. 1933년 몬테비데오협약 제1조는 상주 인구, 확정된 영토, 정부, 대외관계 능력을 국가의 요건으로 열거하고, 제3조는 국가의 정치적 존재가 타국의 승인과 무관하다고 규정한다.

를 사투리로 낭독한다(상권 51-53면). 국가를 연기하는 첫 재료부터가 기존 국가의 법 문서다. 노(老)변호사가 일본국 헌법 제22조로 반박하자 부세판장은 지배국의 헌법을 본보기로 삼았다고 답한다. “당신네들 나라의 헌법은 좋은 헌법이올시다. 우리 쪽 나라의 헌법은 실로 당신네들 나라 일본국의 헌법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본보기로 삼아 만든 것이올시다.”(상권 54면)¹²⁾ 국가의 실물은 세로 13센티미터, 가로 20센티미터의 천 조각이다(상권 201면). 주민들에게는 남의 법조문, 남의 헌법, 손바닥만 한 국기밖에 없다. 발언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지배국의 법조문을 전유해 스스로 정치적 주체임을 선언한다.

안정효의 『술섬』에서 황송공화국의 탄생 조건은 정반대다. 융기한 땅은 기존 지도와 등기부에 없어서 적용할 법이 없고, 재벌 한재산은 그 공백을 선점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한다. “지도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땅에서 불법이고 합법이고를 뭇하러 따지나? 법이 있거나 해야 불법도 있지. (...) 불법은 나중에 소급하여 합법으로 만들면 그만이야.”(1권 118면) 자본이 먼저 선점하고 권력이 소급 승인한다는 순서다. 건국의 밑그림도 같은 논리를 따른다. 설계자들은 개헌 비용을 아끼려는 계산에서 통치 형태를 처음부터 25년 단임 대통령제로 못 박고(1권 131면), 나머지 통치 제도도 요정 밀실에서 맺은 구두 합의로 정한다. 키리키리국은 법을 빌려 국가를 연기하고, 황송공화국은 법의 부재를 자본의 기회로 쓴다. 그러나 두 신생국이 마주하는 승인과 군사적 압력은 강대국의 대응에 크게 좌우된다.

키리키리국이 독립을 선언하자 일본 정부와 언론은 곧바로 그 자격을

12) 주민들은 조문만 흉내 내지 않고 그 조문이 담은 원리까지 물려받았다. 상권 제8장에서 무장론이 일자 누마부쿠로 노인은 세계 각국의 독립 승인이 탐나서 군비를 가진다면 키리키리국 헌법 제9조는 어찌 되느냐고 꾸짖고, 그 조문을 일본국 헌법에서 훔쳤고 그 조문에 반하고 반해서 몽땅 끌어 왔다고 내력을 밝힌다(상권 553면). “일본국의 여러분이 이토록 제9조를 모질게 다룬다면, 우리가 몽땅 인수해서, 군비의 ‘군’ 자도 없이 나라를 만들어 보이겠다. 군비 없이, 작을망정 한 개의 국가를 지탱해 보이겠다.”(상권 555면) 일본국 헌법의 평화 조항이 일본이 아니라 키리키리에서 사수되는 반어다.

부정한다. 방송시는 보도 도중에 자막 ‘키리키리 독립하다’를 ‘키리키리 집단난심(集團亂心) 사건’으로 바꾼다(상권 210면). 언론이 사건 이름부터 바뀌 신생국의 자격을 지운다. 정부는 이어 형법과 정신위생법을 동원한다. 방송에 출연한 도쿄대의 히라사와 교수는 형법 제77조 내란죄를 낭랑하게 암송하고(상권 171면), 정신위생법을 들어 주민 4,200명 전원을 정신 병원으로 보낼 수 있다는 논리까지 편다(상권 173면). 형법은 독립을 반란으로, 정신위생법은 반란자를 환자로 재분류한다. 자위대는 공수부대를 투하하기에 앞서 본금성(本金成) 지구에 포탄 50발가량을 퍼붓는다(하권 386-388면). 그런데 국제법 논쟁에서 키리키리국은 밀리지 않는다. 마을 경계의 도랑을 국제하천으로 규정하고, 오펜하임의 국제법 교과서와 코스타 사건 선례로 논전을 벌여 이긴다(하권 391면, 475-477면).

하지만 법리로 이기고도 이 나라는 존속하지 못한다. 이런 결말을 법무대신은 논전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예고한 바 있다. “이론은 이제 됐어. 이론 따위 엇이나 먹으라지. (...) 도대체 국제법이 다 뭐야. 저런 작자들을 어느 나라가 제대로 상대한단 말인가”라는 법무대신의 일갈에, 히라사와는 “제대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상대하는 나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라고 답한다(상권 204면).

안정효의 『술섬』에서 그 ‘정치적으로 상대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황송을 독립국으로 승인하고, 한국 함대의 상륙을 다국적군으로 막는다. 노세환 대통령은 전술 대응보다 ‘다국적군’의 어의(語義)를 따지는 데 매달린다(1권 144면).¹³⁾ 안정효가 이 소설을 쓰던 무렵의 한국에서도 한미 FTA의 조문 해석과 쇠고기 검역 기준을 놓고 주권 논쟁이 벌어졌다. 노세환의 어의 시비는 당대의 주권 논쟁을 희화적으로 재연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13) 노세환은 미국과 아메리카합중국을 같은 나라이므로 ‘다국적군’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어의학(語義學) 논쟁에 매달려 백악관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매컬럼은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의 state가 국가를 뜻하니 합중국은 본질에서 다국적이라고 응수한다(1권 144면).

황송의 설계자들은 독립 선언에 앞서 미국의 승인과 기지 제공 조건을 밀서에 명시한다. 열여섯 살 밀사 하니가 고미요정에서 매컬럼에게 건넨 밀서는 황송을 “준연방적(準聯邦的 semi-federal) 주둔지”로 간주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보답으로 육해공군 기지를 “향후 99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1권 136면)고 밝힌다.¹⁴⁾ 승인을 얻으려고 주권 등급까지 스스로 낮춘 문서다. 주민의 국적과 거주 여부도 승인을 둘러싼 양국의 전략에 따라 조정된다. 한국은 섬에 사는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보낼 수 있다. 매컬럼은 그 명분을 없애려고 원주민을 황송 시민으로 귀화시키는 무인화 작전을 짜고, 한국 정부는 이주민을 들여보내 국민을 채운다. 두 나라는 주민 교체를 되풀이한다(1권 156-159면).

매컬럼과 정보참모 트라이던트는 독립과 쿠데타와 반쿠데타를 차례로 기획한다. 황송 안의 세력들이 주도권을 다투다 죽고 쫓겨나는 동안, 두 사람은 대사관과 정보 계통에 남아 실패의 책임을 지지도, 신변의 위협을 겪지도 않는다.

키리키리국과 황송공화국의 이야기가 승인 여부를 둘러싼 건국 초기의 서사라면, 제주공화국의 이야기는 승인을 얻은 다음에도 계속되는 조정의 서사다. 작중 2045년 한반도는 남북이 통일된 대한연방공화국과 제주공화국으로 다시 분단되어 있다. 분단 시대 ‘북한’에 주어졌던 지정학적 용도를 제주가 넘겨받는다.¹⁵⁾ 제주공화국은 승인과 장기 통치 능력을 함께 갖춘 나라다. 독립 선언 직후 대한연방공화국은 육해공 전면으로 섬을 공

14) 밀서를 쓴 초대 대통령 이계산은 황송을 ‘중화민국’의 동북아시아 진출을 아메리카합중국이 견제할 “가장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교두보”로 규정하고, 타이완과 유대해 ‘중화민국’에 근접한 중간 기지를 구성하겠다고 제안한다(1권 135-136면). 밀서는 “러시아와 중화민국의 공산주의 공동 전선”(1권 135면)이라고 써서 대륙 중국을 시종 ‘중화민국’으로 부른다. 이러한 국호의 혼동은 건국 설계자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풍자로 읽을 수 있다.

15) 분단 시대 ‘북한’에 주어졌던 지정학적 용도를 제주가 넘겨받다는 정식화는 임태훈(2023)의 107면에 나온다. 서술 시점 2045년을 기준으로 존속 기간이 21년에서 23년 사이가 되므로 본문은 ‘20여 년’으로 표기한다.

략한다. 서술자는 그 전쟁이 일주일만 더 이어졌다면 1948년 이래 최대의 민간인 학살이 벌어졌으리라고 추정했다(467면). 도쿄와 베이징이 먼저, 유럽연합과 러시아가 그다음, 미국이 마지막으로 독립을 승인한다. 일본과 중국이 중재한 오사가 강화조약으로 옛 중주국의 인정까지 얻는다. 서술 시점인 2045년에도 이 나라는 건재하다. 다만 승인 이후에도 일본은 북방 4개도에서 센카쿠 제도에 이르는 열도의 치열(齒列)에서 제주만 빠졌다는 ‘징검돌’론으로 영토 야심을 내비친다(463면).

세 작품에서 국민 자격은 출생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국적과 거주에 관한 제도를 통해 구성되는 법적 지위다. 몬테비데오협약은 상주 인구를 국가의 첫 요건으로 꼽지만, 세 나라에서 거주와 국민 자격은 겹치지 않는다. 키키리리 주민 4,200명은 독립 전부터 그 땅에 살았지만, 국민 자격은 독립 선언과 함께 생긴다. 같은 열차의 승객들은 그 순간 여권을 요구받는 외국인이 된다. 황송에서는 자격만이 아니라 인구부터가 공작의 산물이다. 앞서 본 무인화 작전에서 송도리 원주민 열여덟 명 가운데 생존자 열다섯 명이 황송 시민이 되어 황송으로 이주하고, 한국 정부가 새 이주민을 송도리에 보내 그 빈자리를 채운다(1권 156-159면). 제주공화국에서는 귀화 주민들이 승인 이후의 정치 지형을 바꾼다. 서귀포시와 제주시 시민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이들은 자신을 한국인의 후예가 아니라 제주인으로 여기게 되고, 공식 담화 밖에서는 제주어를 쓴다(455-456면).

강대국의 승인 여부는 세 작품 모두에서 신생국이 외부의 군사적 압력에서 살아남는 데 결정적이다. 다만 승인은 초기 생존을 좌우할 뿐 장기 존속까지 보장하지 않는다. 세 소설에서 대외적 승인과 대내적 통치 능력은 서로 분리된다.¹⁶⁾ 키키리리국은 헌법과 화폐와 국어에 병원까지 갖추고도 승인을 얻지 못하고, 황송공화국은 허위 개발계획으로 국고를 채우고 요정 밀실의 구두 합의로 통치 제도를 정하고도 국제사회의 인정부터

16) 41시간 동안 키키리리국을 승인한 나라는 없다. 분리 독립의 승인 선례와 국가 승인의 법리를 다루는 대목(상권 453면, 460면, 515-516면)은 전부 법리 공방이다.

얻는다. 제주공화국은 승인과 통치 능력을 겸비(兼備)한다.

『吉里吉里人』의 서술자는 에도시대에 목을 찢려 죽은 뒤에도 마을을 떠나지 못한 유령 키리키리 젠베에다.¹⁷⁾ 그는 마지막 장에서 이 역설의 까닭을 밝힌다. 세계의 대국들은 저마다 자기 나라 안에 ‘키리키리적 부분(吉里吉里的部分)’을 안고 있다. 독립 이틀째에, 쓰러진 대통령이 마지막 막으로 손을 잡은 사람에게 대통령직이 넘어가는 터치제로 제2대 대통령직을 승계한 소설가 후루하시가, 병원 체인 전략을 세계에 떠벌린 순간, 대국들은 미리 잠입시켜 둔 특수부대로 마을 국가를 단숨에 짓밟는다(하권 606면). 분리 독립의 상상은 어디에나 잠재하고, 그래서 어느 대국도 그 실현을 반기지 않는다.

세 작품에서 외부 세력의 대응은 영토의 전략적 용도에 따라 정해진다. 황송의 설계자들은 미군 기지를 99년 동안 무상으로 내주고 미국에서 승인과 군사적 보호를 얻는다. 키리키리국은 그런 외부 후원 없이 일본 정부의 무력에 맞서다 소멸한다. 제주는 기지를 내주지 않는 대신 대외 관계를 상시(常時) 관리하는 비용을 치르면서 존속한다.

세 작품의 대외 질서에는 공통 조건이 하나 더 있다. 미국이다. 세 작가는 미국의 개입을 같은 방식으로 그리지 않지만, 미국이 주도한 안보·경제 질서 바깥의 독립은 상상하지 않는다. 황송공화국에서 미국은 독립을 기획하고 군사적으로 보호하는 작품 안의 행위자이고, 제주공화국에서 미국은 다른 주요 국가들에 이어 독립을 승인하며, 중국과 함께 한국의 핵 무기 사용을 견제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키리키리국에서 미국은 협상의 당사자로 나서지 않고, 미일 동맹을 명문화한 1981년의 안보 체제가 일본 정

17) 젠베에의 내력은 하권 605면에 나온다. “キリキリ善兵衛、御上におさめるべき年貢を一時、流用し、吉里吉里村に水路を引く普請費用として使ってしまった男だ。そしてお咎を蒙って咽喉を突いて自害した”, “키리키리 젠베에, 영주께 바쳐야 할 연공을 한때 유용해 키리키리 마을에 수로를 내는 공사 비용으로 써 버린 남자다. 그리고 문책을 받아 목구멍을 찢려 자결했다.” 그의 전기는 중권 제13장에 실려 있다.

부의 정책을 제약할 뿐이다. 그래도 키리키리 사람들은 미국산 농약과 곡물을 쓰고 미국식 병원 제도를 들여오고,¹⁸⁾ 서술자가 꼽는 대국의 명단도 미국으로 시작한다.

세 나라의 독립은 군사적 압력 및 보호 문제와 얽혀 있다. 제주에서는 독립전쟁과 국제적 승인, 정전 중재가 맞물린다. 황송은 미국의 보호를 받는 한편 영토 매매의 조건으로 한국군 주둔을 받아들인다. 키리키리국은 외부 승인을 얻지 못한 채 비무장 원칙을 고수한다. 무장론이 일 때마다 우인회의(愚人会議)의 좌장 누마부쿠로 곤타자에몬 노인이 헌법 제9조를 들어 꾸짖고, 마을이 내세우는 억지력은 은행과 병원이다. 이노우에는 승인이나 무장을 통한 존속 대신, 여러 강대국의 공작원들이 벌이는 대규모 살해로 국가를 소멸시킨다. 평화헌법을 고수하는 신생국이 국제적 폭력에 노출되는 결말이다. 이 작품에서 비무장 신생국의 존속 시간은 41시간으로 제한된다.

3. 변기와 금반지, 축적은 종속과 배제를 없앨 수 있는가

일본 정부는 1981년 3월 제2차 임시행정조사회를 설치하고 ‘증세 없는 재정 재건’을 내걸었다.¹⁹⁾ 1975년도 보정예산에서 재개된 특례 공채 발행과 그 뒤 누적된 국채 잔액이 정책의 배경이고,²⁰⁾ 국철과 의료, 쌀이 재정

18) 『吉里吉里人』 상권에는 개진 조서 연습 문제(상권 158면), 중권에는 고엽제(落葉劑) 안내장(중권 19-20면)과 콘티넨탈 그레인 사장의 공급 중단 발언(중권 184면), 오더리 제도를 본뜬 병원 급여 체계(중권 498면, 538면)가 나온다. 그러나 미국 정부나 미군이 협상의 당사자로 무대에 오르는 대목은 세 권 어디에도 없다.

19) 제2차 임시행정조사회는 ‘臨時行政調査會設置法’에 따라 1981년 3월 16일 발족했다. ‘증세 없는 재정 재건(増税なき財政再建)’은 1981년 7월 제1차 답신의 중심 과제였다. 영미의 정책 전환과 같은 시기에 벌어진 병렬적 사건이다.

20) 経済企画庁 編, 『昭和51年版 経済白書—新たな発展への基礎がため』, 大蔵省印刷局, 1976; 財務省財務総合政策研究所財政史室 編, 『平成財政史—平成元~12年度』 第1巻「総説・財政会計

적자 항목에 들어갔다. 같은 해에 나온 『吉里吉里人』에서 키리키리 주민들은 쌀과 의료를 국가가 보장해야 할 생활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두 한국 작품에는 1997년 외환위기 뒤의 구조조정이 깊이 반영되어 있다. 「우리 고장에선 그렇게 말하지 않아」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술섬』은 그 여파가 이어지던 2012년에 나왔다. 안정효는 국민이 금불이를 모아 외채를 갚던 1998년의 장면을 영토 대금 모금으로 다시 썼다.

안정효는 『술섬』에 방폐장 소동도 재료로 넣었다. 입지 계획은 안면도(1990)와 굴업도(1994-95)와 부안(2003-04)에서 주민 반대와 부지 부적합 판정으로 잇따라 무산됐다.²¹⁾ 2005년 11월 주민투표를 거쳐 경주가 중저준위 처분장 부지로 정해졌지만, 사용후핵연료를 묻을 고준위 처분장의 입지는 그 뒤로도 정해지지 않았다. 안정효는 그 연쇄를 건국 서사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중앙정부는 생산조정과 안보와 폐기의 부담을 주변 지역에 나누어 지웠다. 내부 식민주의 논의는 이 구조를 다뤄 왔다.²²⁾ 다만 도호쿠와 제주 는 그 논의로 검토할 수 있는 실재 지역이고, 술섬은 기피 시설의 입지 비용을 주변 지역에 전가하는 정책 구조를 극단화한 가상의 공간이다.

고종석이 제주를 세계 금융 허브로 그린 설정에도 당대의 밑그림이 있다. 2003년 이후 한국 정부가 내걸었던 동북아 금융 허브 구상이 그 모델이다.²³⁾ 고종석은 서울을 동북아 금융 중심지로 삼으려던 정부 구상을 독립한 제주가 실현하는 상황으로 뒤집었다. 당대의 정부들이 국가의 일을 비용으로 계산했다면, 세 작가는 국가를 아예 사업체로 그려 그 계산법을 풍자했다.

制度], 白峰社, 2017, 615면.

21) 굴업도는 지정 고시 뒤 인근 해저에서 활성단층군이 확인되어 해제됐고, 부안 위도는 주민 반대와 절차적 정당성 논란 속에 후보지 지위를 잃었다.

22) 김동현, 「로컬리티의 발견과 내부식민지로서의 ‘제주’」,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참고.

23) 재정경제부와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는 2003년 12월 11일 제32회 국정과제회의에서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정당성을 어디서 얻고, 재정을 어디서 마련하고, 외부 시장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가 세 나라마다 다르다. 이 세 항목을 이 연구는 자본축적(capital accumulation)의 조건으로 다룬다. 축적은 잉여를 얻어 다시 투입하는 순환을 가리키는 개념이지만, 신생국에서는 그 순환과 국가 건설이 한 몸으로 진행된다. 재원을 어디서 끌어오느냐가 그 나라를 외부의 어느 세력에 묶어 두는지도 함께 정한다.²⁴⁾ 키키리의 은닉된 금과 황송의 지대 추구와 제주의 금융 중개가 그 사례다.

키키리국은 중앙이 떠넘겨 온 희생의 역사에서 독립의 정당성을 찾고, 금 준비금과 농업 생산과 의료 서비스로 재정과 대외 거래의 기반을 마련한다. 후지와라노 기요히라(藤原清衡)가 은닉했다고 전해지는 황금 약 4만 톤이 군자금이 되고,²⁵⁾ 지급하는 쌀이 식량이 된다. 미국과 서독, 일본의 의학보다 적게 잡아도 30년 앞섰다는 의술(하권 186면)은 수출품이 된다. 쌀과 의술은 중앙이 낙후의 증거로 여기던 농촌 살림에서 나온다. 감반 명령을 받던 논이 식량 주권의 밑천이 되고, 학벌 없는 명의들이 의료 수출을 맡는다. 황금의 내력은 다르다. 12세기 히라이즈미(平泉)의 후지와라 가문이 묻어 둔 부가 땅속에 남아 있었다는 설정이므로, 키키리국의 군자금은 중앙이 수탈하기 전부터 도호쿠가 지녔던 재산이다. 세 재원은 모두 중앙이 값을 매기지 않던 변방의 자산이다.

안정효는 황송공화국의 건국에 주민의 집단 의사나 역사적 권원을 주지 않았다. 재정은 허위 개발계획과 정치적 특혜, 토지 불허에 의존한다. 생산 활동보다 국가의 허가권과 공공자산 배분에서 수익을 얻는다. 지대 추구형 경제다.²⁶⁾ 한국 폐기청의 목설구 국장은 서해군 송도리 술섬을 고

24) 이 연구는 그 순환의 조건 가운데 신생국이 국가를 세우면서 직면하는 부분에 한정해 쓴다.

25) 금 전문가 다카기 지로의 산정치는 3만 9,700톤이고(하권 235면, 527면), 소설의 서술은 그 수치를 약 4만 톤으로 통칭한다(하권 306면, 369면, 424면). 후지와라노 기요히라 은닉 전설은 작품 첫머리에 나온다(상권 34-36면).

26) 지대 추구는 생산과 교환으로 새 가치를 만들기보다 정치권력과 규제와 공공자산의 배분에 개입해 특혜와 이전소득을 챙기는 행위를 가리킨다.

농축 콜리디움 매립장 후보지로 보고한다. 콜리디움은 안정효가 지어낸 가상의 방사성 폐기물이고, 후보지 선정의 근거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 공학이었다. 주민이 12가구 18명뿐이고 전원 칠순 노인이라 저항할 세력이 없다는 것이다(1권 15-16면). 발표만으로 정치자금을 거두고 여론이 나빠지면 접는 이 이중 설계를 목설구는 ‘검은 양의 원칙’이라 부른다(1권 18-19면).

가짜 계획 끝에 섬이 실제로 융기해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은 달라지지 않는다. 계약서를 쓸 수 없는 땅이라 발전소는 구두 밀약의 외상으로 짓고, 목설구는 그 조항이 들어갈 문서를 “우리 두 사람이 작성하지 않을 계약서”(1권 122면)라고 부른다. 목설구는 지원 예산이 늘수록 중앙의 영향력도 커진다고 보고, 중앙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려고 밀약을 택한다. 신생 토지 전체를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해 불하와 경매로 국고를 채우는 동안, 외부 시장과의 교역 관계는 이 나라의 회계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키리키리국은 무기 대신 상호 의존을 억지력으로 내세운다. 다국적 기업의 자금과 곡물 자원을 함께 끌어들이고, 세계의 권력자들이 목숨을 맡기는 병원을 운영한다. 병원장은 “의술은 전술이어야 한다”(중권 498면)고 훈시한다. 일본이 무력을 쓰면 다국적 자본이 자금을 빼고, 밀과 대두 공급이 끊기고, 병원이 문을 닫아 세계 각국의 환자와 권력자들까지 피해를 입는다. 일본이 키리키리국을 마을로 되돌리면 다국적 기업이 국립은행에 맡긴 자금도 일본법 적용을 받으므로, 무세금 정책이 이 나라를 지키는 요새가 된다(중권 247면). 독립 32시간 만에 금본위 태환은행권(하권 231면)의 가치는 다섯 배 넘게 뛰다(하권 279면). 금 태환의 약속으로 통화는 초기 신뢰를 얻는다.

황송공화국에서는 건국 이후 정치 활동이 통째로 기업적 서비스가 된다. 정당이 307개면 당명이 팔리고, 후보가 서둘면 연기 교습이 팔리고, 낙선이 두려우면 펀드가 팔린다(2권 225-231면). 한재산은 산업과 정치사

업을 자식들에게 나누어 물려주고, 그가 죽은 뒤에도 김모시 감사가 “아마 회장님 뜻은 이것이었겠지요”(2권 257면)라는 해석으로 결재를 이어 간다.

제주공화국에서는 4·3의 기억이 독립의 역사적 정당성이 되고, 세계 시장과 직접 연결된 경제가 국가의 살림을 감당한다. 이 나라에서 축적의 방식은 방위의 방식이기도 하다. 고종석은 제주시의 일본계 거주 구역 ‘리틀 도쿄’를 “마천루로 뒤덮인 세계 금융 중심지 둘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나머지 하나로 뉴욕의 월스트리트를 들었다. “유로-아메리카 세계에 뉴욕의 월스트리트가 있다면, 오세아니아를 포함한 아프로-아시아 세계엔 ‘리틀 도쿄’의 혼마치本街가 있다.”(460면)²⁷⁾

키리키리국이 마을 단위의 조세 피난처라면 제주공화국은 나라 전체가 금융 중심지다. 키리키리국은 외부 자본의 이해관계를 군사적 공격의 비용을 높이는 억지 전략으로 삼는다. 제주공화국의 금융 중심지 설정도 공격과 고립의 경제적 비용을 높이는 장치로 읽을 수 있다. 다만 고종석은 이 설정이 제주공화국의 20여 년 존속을 낳았다고 직접 설명하지 않았다.²⁸⁾

고종석의 미래 연대기 서술자는 번영을 수치로 제시했다. 2023년에 제주인의 1인당 국민소득은 한반도 사람들의 세 배가 넘었고, 일본의 1인당 소득보다도 약간 높았다(464면). 서술 시점인 2045년까지 그 격차는 유지된다(462면). 고종석은 그 번영과 한국어 화자의 제도적 배제를 함께 서술했다. 번영이 배제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경제적으로 성공한 독립국에서도 언어적 배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키리키리국과 황송공화국은 금을 정반대로 다룬다. 재원 조달과 영토

27) 고종석은 유로-아메리카 세계의 월스트리트와 아프로-아시아 세계의 혼마치를 맞세웠다. 작중 제주는 월스트리트와 대등한 곳이다.

28) 제주 금융 허브를 억지의 조건으로 읽는 이 대목은 작품이 명시한 인과가 아니라, 금융망이 공격의 경제적 비용을 높일 수 있다는 비교 독해의 해석으로 한정한다. 임태훈(2023)은 제주의 금융 허브 설정을 세계 금융 자본주의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에치슨 라인(Acheson line)처럼 방패 삼은 것”으로 읽었다(109면).

통제의 관계는 두 나라가 금을 다루는 장면에서 가장 뚜렷하다. 키리키리국은 준비금 전체를 변기로 주조한다. 약 4만 톤의 금이 황금 변기가 되어 국립병원의 변소마다 놓여 대소변을 받는다(하권 527-529면).

금 변기는 금에 부여된 경제적 권위와 숭배를 배설의 대상으로 끌어내린다. “3억 엔 상당의 물건에 대소변을 끼얹어도 되는 것일까”(하권 529면)라는 후루하시의 물음은, 금의 교환가치를 변기의 사용가치보다 앞세우는 태도의 회화화다. 이것은 이중 역설이기도 하다. 금을 조롱하는 나라가 그 금으로 통화를 지키고, 태환의 신용 덕에 키리키리국의 화폐 이엔(イエン)은 폭등한다. 발표 시점까지 따지면 역설이 한 겹 더 있다. 미국은 닉슨 쇼크(1971)로 달러의 금 태환을 정지했고, 세계는 신용화폐 체제로 옮겨 갔다. 십 년 뒤에 마을 하나가 그 폐기된 약속을 복원한다.²⁹⁾ 일본 정부가 미일 동맹 아래 사실상 형해화(形骸化)한 평화헌법을 키리키리국이 조문 그대로 이어받듯, 기축통화가 버린 태환의 약속도 이 변방이 넘겨받는다. 중심부가 폐기한 규범을 변방이 대신 지킨다. 그러나 그 억지 수단에는 약점이 하나 있다. 후루하시는 자위대 소대장에게 금 발견지에 관한 정보를 흘리고, 취임식에서는 병원 변기가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현재의 은닉 방식까지 공개한다.

황송공화국의 금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국민의 금이 영토 매매의 대금이 된다. 목설구는 로마 친위대가 제국 통치권을 경매에 부친 고사에서 이름을 딴 ‘로마 협상’을 한국에 제시한다(1권 150면). 한국 정부는 그 협상에 반대하고, 매매는 군사독재자 변용호 정권이 무너진 뒤에야 성사된다. 한국이 처음 부른 값은 500조 원이다. 진무성 과도정부에는 그 액수를 감당할 국고가 없고, 한국 정부도 “북한과의 대립만으로도 지정학적으로 안정된 균형을 유지하기가 부담스럽기 짝이 없었던”(2권 271면) 처

29) 하권에서 후루하시는 키리키리 이엔을 세계 유일의 태환은행권으로 설명하고(하권 231면), 다카기 지로는 달러 체제의 신용 하락을 들어 그 돈이 갈 곳으로 금을 지목한다(하권 232-235면).

지라 또 다른 이웃과의 마찰을 원하지 않는다. 합의된 금액은 100조 원, 조건은 10년 분할 상환과 완불 때까지 한국군 1개 중대를 주둔시키는 것이다(2권 271-272면). 채권국은 채무국이 낼 수 있는 액수와 자국이 떠안을 지정학적 부담을 함께 셈해 영토 값을 매긴다.

첫해 대금 10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 모금 운동이 벌어지고, 궁핍한 국민은 금반지와 금불이를 내놓는다(2권 272면). 1998년의 금 모으기 그대로다. 미군과 함께 살아온 분단국 한국은 이번에는 채권국이 되어 주둔군의 경험을 강제 조항으로 황송에 옮겨 놓는다. 1997년 말에 갚아야 했던 빚이 달러 부채였으므로, 술섬의 모금은 장면만이 아니라 기축통화 체제 안의 약소국 처지까지 재연한다.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황송의 영토 통제권은 분할 상환의 조건에 종속된다. 국가의 땅이 부동산으로 거래되고, 국민이 구매 대금을 부담하고, 완납 때까지 주둔하는 한국군이 채권국의 권리를 강제한다.

확인되는 제약은 하나다. 세 작품에서 신생국은 대외 경제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키키리국은 달러 질서가 폐기한 태환 약속을 복원하고, 황송공화국은 달러 부채를 금으로 갚던 기억을 재연해 채무자가 되고, 제주공화국은 세계 금융망에 거점으로 편입된다. 세 나라가 자금을 조달하고 축적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세 나라는 곡물·자본 공급, 영토 채무와 주둔 조건, 교역 의존 등 서로 다른 경로로 외부 세력의 제약을 받는다. 내부의 부담과 불리한 지위 역시 사라지지 않는다.

4. 새 국어는 누구를 언어적 소수자로 만들까

세 작품이 다루는 언어 정책은 두 시대에 걸쳐 있다. 이노우에는 근대 국민국가의 표준어 체제를 풍자했다. 국가는 백 년 동안 징병과 학교 교육과 방송으로 방언에 낙인을 찍어 왔다. 고종석과 안정효의 두 작품은

영어 공용화론이 한창이던 시기의 산물이다. 대표적으로 복거일은 1998년에 영어를 한국어와 나란히 공용어로 삼자고 제안했다. 일본의 오부치자문 기구는 2000년에 영어 제2공용어화를 검토했고, 2008년 1월에는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³⁰⁾ 고종석은 1998년 발표한 「우리는 모두 그리스인이다」와 이를 수록한 『감염된 언어』(1999)를 통해 영어 공용화 논쟁에 참여했다.³¹⁾ 근대 표준어 체제와 국가가 추진하는 영어 공용화론은 공적 언어를 정책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이때 국어 정책은 국민 내부에서 누가 공적 언어에 접근하기 쉽고 누가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지를 정한다.

근대 표준어 체제에 키키리국이 맞서는 방식은 방언의 승격이다. 국어 교본 『키키리어 4시간』은 표준어의 정체부터 고발한다. “표준어는 인공의 것이고, 중앙의 어떤 사람들의 ‘의향’이고, 질병 명령이나 전사 통지나 증산 명령이나 감반 명령을 실어 나르는 흐름에 지나지 않았다.”(상권 123면) 교본은 고발의 근거로 역사적 수난을 든다. 1909년에 실제로 나온 이자와 슈지(伊沢修二)의 『시화응용 동북발음교정법(視話応用東北発音矯正法)』을 비판한다. 이 책은 설소대가 과도하게 붙은 사람에게 의사 진단과 절단을 권했고, 교본의 서술자는 그것을 방언 화자를 “육체

30) 복거일,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 문학과지성사, 1998. 「국제어에 대한 성찰」(165-183면)이 논쟁의 진원이다. 복거일은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는 조치”를 제안했다(180면). 일본 쪽 보고서는 「21世紀日本の構想」懇談会, 『日本のフロンティアは日本の中にある—自立と協治で築く新世紀』(講談社, 2000)이고, 영어 제2공용어 검토 제안은 요약부와 제6장에 나온다. 한국 쪽 문건은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방안」(공청회 시안, 2008년 1월 30일)이다.

31) 고종석의 공용화론은 국가에 공용어 지정을 요구하는 주장이 아니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인이다」는 『인물과 사상』 제8권(1998년 10월)에 처음 실렸고, 『감염된 언어』(개마고원, 1999) 초판에 수록됐다. 그는 이 글에서 “가장 좋은 언어정책은 언어를 그냥 놓아두는 것”이라고 주장했고(2007년 개정판, 175면), 개정판 서문에서 “한국어 순화가 됐든 영어 공용이 됐든, 나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 언어정책에 반대한다”고 다시 밝혔다(6-7면). 그런데 국가 개입에 반대한 에세이스트가 소설에서는 국가가 개헌과 표결로 국어를 정하는 세계를 그렸다.

적 결합자로 만들어 버린”(상권 120면) 사례로 평가한다.³²⁾ 같은 교본에 발음 때문에 비웃음을 산 끝에 저마다 목숨을 버린 세 사람의 최후가 실려 있다(상권 121-122면). 표준어 체제의 사망자 명부다.

키리키리국은 방언을 승격하면서 표준어와의 위계까지 뒤집는다. 태평양전쟁 개전 조서를 사투리 문법의 연습 문제로 번역시키는 과제(상권 158면)에서 제국의 가장 엄숙한 문서는 교재로 격하되고, 방언이 국어의 지위를 얻자 표준어 화자 후루하시는 통역을 구걸하는 외국인이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농민으로 살아가는 한, 키리키리어는 우리의 피부이고, 살이고, 피이고, 뼈이고, 요컨대 우리 자신인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말로 생각하기 시작할 때, 중앙의 지시와 정면으로 부딪친다.”(상권 124면)³³⁾

고종석과 안정효는 1990년대 말 이후 영어 공용화 논쟁이 이어지던 시기를 서로 반대로 다뤘다. 국어 교체가 제주공화국의 정책이다. 개헌으로 제주어를 제1공용어로 올리고, 영어를 제2공용어로 유지하고, 한국어를 옛 지배국의 외국어로 강등한다. 현실에서 세대 전승이 끊겨 가던 제주어가 소설에서는 국가의 제1언어로 올라선다. 제주공화국은 새 국어를 표결로 정한다. 개헌안은 정원 45명의 상원에서 찬성 31표, 반대 12표, 기권 2표로 가결되고, 하원에서는 100명 가운데 84명의 찬성을 얻는다. 국민투표에서도 59퍼센트가 찬성해 법정 요건을 넘긴다.³⁴⁾ 그러나 국민투표 찬성률은 제주어 선호 여론조사의 81퍼센트보다 22퍼센트포인트 낮다(461

32) 伊沢修二 著, 小松久夫 記, 『視話応用東北発音矯正法』, 楽石社, 1909, 22-23면. 이 책은 발음 기관을 설명하면서 설소대에 해당하는 ‘舌緊帶’가 과도하게 붙은 사람에게 “舌緊帶の多く附着せる人は医師の診断を乞うて、之を切斷するがよい”라고 권고했다. 도호쿠 방언 화자 전체를 수술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

33) 본문에서 인용한 상권 124면 대목의 원문이다. “わたしたちがこの地で百姓として生きるかぎり、吉里吉里語はわたしたちの皮膚であり、肉であり、血であり、骨であり、つまりはわたしたち自身なのだ。わたしたちがわたしたちの言葉でものを考えはじめるとき、中央の指図とはまっこうからぶつかる。”(상권 124면)

34) 개헌 요건은 2040년 헌법이 정한 상원 3분의 2 동의와 하원 과반수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수 찬성이다(459면). 표결 수치는 461면과 472면에 나온다.

면, 472-473면). 법정 절차에 따라 개헌이 확정되자 민족주의 성향의 『고려일보』는 전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같은 계열 방송사는 유권자들의 경솔함을 꾸짖는다(473면). 고종석은 개헌 확정에 이어 전쟁 위기를 서술하고 그 뒤를 쓰지 않았다. 전쟁이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결말이다.

미래 연대기의 서술자는 전쟁이 나고 안 나고가 언어에 달렸다고 직접 진단했다. 독립전쟁을 끝낸 강화조약 무렵 한국 군부 일부는 영토를 잃느니 핵무기를 쓰자고 주장했다. 그들이 물려선 이유를 서술자는 이렇게 밝혔다. 제주도가 독립하더라도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동족 국가가 되리라는 전망 때문이었다.”(471면) 한국어를 공용어에서 추방하면 그 근거부터 크게 줄어든다. 이 서술에서 언어의 공유는 두 나라를 동족 국가로 간주하는 근거다. 서술자에 따르면, 제주어 화자와 한국어 화자가 자기 말만으로 소통하기는 스페인어 화자와 포르투갈어 화자 사이보다 어렵다. 서술자는 한국어가 선택 외국어로 밀려나면 두 나라를 완전한 외국으로 여기는 의식이 빠르게 퍼지리라고 전망했다(471면). 미국과 중국의 견제에 더해 언어·문화의 공유도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근거로 제시된다. 공용어 교체는 그 가운데 동족성에 기댄 억제 근거를 약화한다. 새 헌법 부칙은 제주어와 한국어를 함께 쓸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473면). 고종석은 공용어 교체가 군사 충돌의 가능성을 높이도록 설정했다. 이 작품에서 언어 정책은 외교와 안보를 좌우하는 지정학적 사건이다.

황송공화국은 한국어를 폐지하고 영어로 대체하려는 정책을 추진한다. 한국어를 없애고 영어를 모국어로 삼는 20년 교육계획이 수립되고, 그 첫 단계로 초등학교 다섯 곳에서 봄 학기부터 전 과목의 수업을 영어로 진행한다(3권 185면). ‘몰살영어’는 교육부 장관이 구상한 ‘돌격영어’ 정책의 애칭이다. “영어를 통째로 삼켜 몰살시킨다”는 개념은 폴리스쿨 학장 한이(하니)가 대통령에게 낸 소견서에 처음 나오고(3권 184-185면), 콩글리시로 쓴 그 소견서에는 “잉글리시 몰살합시다!”(3권 185면)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목소리』 발행인 이상국은 언론에 “영어는 영어로 일해야 할 사람들만 공부하면 됩니다”(3권 186면)라고 쓰고, 전자공학이나 통신과학 같은 분야에서 나라의 미래를 찾자고 제안한다. 국제어 습득의 비용을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하느냐는 이 반론은 공용화론이 현실에서 받은 비판과 같다. 영어 교육에 필요한 자원에 대한 접근 차이는 새로운 격차를 낳는다. 영어 암기약을 쉽게 구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사이에 어휘력 격차가 커지는 장면이 그 사례다(3권 187면).

고종석이 영어를 세계 시장과 접속하는 수단으로 다뤘다면, 안정효는 영어 숭배가 교육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풍자했다. 두 정책은 영어에 맡긴 몫부터 다르다. 금융 소국 전략을 언어 정책으로 옮긴 제주의 이중 공용어에서 제주어는 정체성을, 영어는 시장 접속을 담당한다. 한국어만 추방하는 언어 정책은 탈식민의 기획이면서 세계 시장에 대한 새 종속의 약관이기도 하다. 황송의 영어 광풍은 한국어를 대체하려는 정책과 그 교육적 혼란으로 나타난다. 교사 공급국인 말라구는 모국어를 잃고도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나라로 묘사된다(3권 189-190면). 이 설정은 황송의 언어 교체 기획에 내재한 모순을 드러낸다.

이노우에와 고종석은 방언 표기와 번역의 방식으로 독자가 어느 언어 쪽에서 작품을 읽을지까지 정했다. 이노우에는 방언을 본문에 그대로 표기했다. 방언 대사의 표준 한자 위에 사투리 발음이 후리가나(振り仮名)로 달려 있어, 표준어 독자는 눈으로 한자를 읽으면서 귀로는 사투리를 듣는 이중 독서를 체험한다. 고종석은 제주어 독립을 추방 대상인 표준 한국어로 서술했다. 마지막 줄에 제주어 문장 하나가 놓이고 그 뒤에 표준 한국어 번역이 괄호로 붙는다(474면). 제주어를 독립된 언어로 내세우면서도 표준어 독자를 해석의 기준으로 남겨 두는 이중 형식이다.

안정효는 표기 대신 어법을 골라, 관용어와 정치 수사가 문자 그대로 집행되는 세계를 그렸다. 뇌물을 ‘대가성 없는 떡값’이라 변명한 자들에게 그 변명대로 떡을 사서 먹이는 혁명재판소의 판결이 그 방식이다(1권 279

면).

세 소설에서 언어 선택과 번역 여부는 공적 정보와 행정에 대한 접근 지위, 정치적 갈등의 양상을 바꾼다. 고종석의 작품에서는 서술 형식과 작품 안의 사태가 어긋난다. 서술자가 표준 한국어를 제주어 번역의 기준으로 쓰는 동안, 작품 안에서는 공용어 개헌으로 한국어 화자가 새 언어적 소수자로 밀려난다.

공용어 정책이 언어 질서를 계획한다면, 실언과 기만적 문서, 그에 대한 오독은 통치의 경로를 예기치 않게 바꾼다. 키리키리국에서는 후루하시의 실언이 소멸을 앞당기고, 황송공화국에서는 홍보물에서 일부러 뻔한 글자가 대통령 당선자를 바꾼다.

상금이 걸리자 후루하시는 13분 20초 만에 에세이 한 편을 갈겨쓴다(하권 289면). 실언도 이때부터 잇따른다. 자위대 소대장의 유도 신문에 걸려 금의 은닉 장소부터 흘린다(하권 369면, 384면). 그러고도 대통령이 된다. 창자가 터진 초대 대통령이 뻔은 오른손을 잡는 순간 승계가 끝나는 터치제 타이다(하권 483-484면, 496-497면). 취임식 생방송에서는 도발에 걸려 병원 체인 전략까지 전 세계 전파에 쏟아낸다(하권 601-602면). 유명 서술자는 후루하시가 편집자의 도발에 넘어가 금의 은닉 장소를 누설한 일을 지목한다. 이어 병원 체인 전략을 세계에 공개한 발언은 그보다 더 큰 잘못이었다고 평가한다. 일본 정부는 금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기 전에는 공격에 나설 수 없었으니, 후루하시의 입이 무거웠다면 나라는 나홀이나 닷새는 더 버텼을 것이다(하권 605면).³⁵⁾ 김태경은 그 결말을 대의제의 대안으로 도입된 추천과 우연성의 계보에서 읽었다.³⁶⁾

35) 다음은 소멸 대목의 원문이다. 화자는 유명 서술자 키리키리 켄베에다. “米、英、仏、ソ、中……世界の大国家がみな、それぞれの国家内に〈吉里吉里的部分〉を抱えている。(…)だから大国家たちは、小説家があの発言をした途端、そういう場合も考えに入れて吉里吉里的の各所に忍び込ませておいた特殊部隊で、一気に押し潰しにかかったのだ。”(하권 606면) 금 은닉 장소의 실언과 ‘나홀이나 닷새’ 대목은 하권 605면에 나온다.

36) 김태경, 「부패하는 권력, 우연성의 정치—이노우에 히사시 『키리키리인』론—」, 『일본연구』

황송의 정치는 여론과 문서에 의존한다. 가상제국의 황제 환탁은 인터넷 만군을 동원해 이상국을 대통령으로 만들려 한다. 그런데 청산당 후보 독고섭이 경력 홍보물에서 전(前) 한 글자를 일부러 빼 ‘회장’으로 행세하자, 환탁은 그를 올사모 회장으로 착각해 당선시킨다(3권 183면). 황송공화국은 건국 이전부터 와전과 허위 문서에 좌우된다. 송도리 주민 황염치 영감의 자랑 한마디가 헛소문으로 와전되어 회귀조류 방새를 멸종 직전까지 몰았고(1권 23면), 가짜 매립장 계획서는 조사단과 투기꾼을 섬으로 불러들였고, 그 소동은 융기한 영토에 새 국가를 세우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화폐는 발행 주체의 지급 능력에 대한 신뢰에, 국가의 문서와 발언은 그것이 집행되리라는 믿음에 기대어 효력을 갖는다. 작동 방식은 다르지만, 공식 기호가 신뢰로 효력을 얻는다는 점은 같다. 후루하시의 실언과 독고섭의 기만적 표기는 언어 행위가 정치적 결과를 바꾼다는 점에서 닮았다. 후루하시의 실언은 은닉 정보를 노출해 외부 공격의 조건을 마련하고, 독고섭의 기만적 표기는 경력에 대한 오인을 유도해 선거 결과를 바꾼다.

말의 오작동으로 흔들린 두 나라와 달리, 제주공화국은 개헌 절차를 통해 공용어 교체를 확정한다. 개헌은 한국어 화자가 공적 언어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일 제도적 조건을 마련하지만, 그 장기적 결과는 작품에 서술되지 않는다. 국가가 공용어를 정하는 순간 공적 언어에서 유리한 화자와 불리한 화자가 생긴다. 언어적 소수자는 수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부여한 접근 지위의 문제다.

89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21, 125-143면. 이 논문은 가라타니 고진의 ‘투표+추첨’ 제안을 참조하면서 터치제의 우연성이 안은 위험 부담을 지적한다. 이 연구는 그 우연성을 제도론이 아니라 언어론의 문제로 옮긴다.

5. 존속의 조건, 배제의 재생산

세 나라의 승인·재정·공용어 제도는 서로 다른 집단에 부담을 지운다. 키리키리국에서는 표준어 화자가 통역에 의존하고, 제주공화국에서는 한국어 화자가 공적 언어에서 불리한 지위로 밀려난다. 황송공화국에서는 영어 교육 자원에 대한 접근 차이가 국민 사이의 격차를 키운다. 제주에서는 그 언어 정책이 전쟁의 개연성을 높이는 데까지 이른다. 세 나라의 마지막은 같지 않다. 키리키리국은 자위대의 공격에 이어 대국들의 특수부대가 들이닥쳐 이틀 만에 소멸하고, 황송공화국은 문어 떼가 상륙하고 해일이 덮쳐 물에 잠긴다(3권 261-262면). 서술자는 마지막 순간에 국명을 용기 이전의 섬 이름으로 되돌린다. “술섬공화국은 정치를 연습만 하다가 멸망을 눈앞에 두고 천천히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3권 281면) 세 나라 가운데 제주공화국만 살아남는다.

이노우에와 안정효는 나라를 없애는 결말을 골랐다. 두 파국은 고발이면서 면제다. 이노우에는 소멸로 신생국을 용납하지 않는 대국의 폭력을 고발했고, 안정효는 수몰로 정치 실험을 중단했다. 면제의 폭은 두 나라에서 다르다. 키리키리국은 이틀 만에 사라져 장기 통치의 시험대에 오르지 못하고, 황송공화국은 원주민의 국적을 통제하고 한국어를 영어로 대체하는 정책을 추진하지만, 그 정책의 장기적 귀결까지 드러나기 전에 물에 잠긴다. 고종석만 나라를 살려 두었다. 존속하는 제주공화국은 통치의 대가를 계속 감당해야 한다. 독립 승인을 얻은 뒤에도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외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한편 공용어 개헌은 한국어 화자가 공적 언어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일 제도적 조건을 마련한다. 소멸한 두 나라에서는 국가의 통치가 중단되지만, 존속하는 나라에서는 통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배제의 해소가 서사적 과제로 남는다. 가장 불편한 결말은 파국이 아니라 존속이다.

독립의 정당성은 배제의 재생산을 막지 못한다. 키리키리 주민 4,200명

은 감반 명령에 맞서 스스로 독립을 선포하고, 제주는 4·3의 학살에 대한 기억과 주민투표, 독립전쟁을 거치고, 황송에서는 목설구와 매컬럼의 공작이 나라를 세운다. 승인·재정·공용어 제도는 각각 국가의 대외적 자격, 자원과 부담의 배분, 공적 언어의 접근 범위를 정한다. 세 작품에서 이 제도들은 국가 바깥뿐 아니라 국민 내부에도 새로운 열위 집단을 만든다.

국가가 자격과 몫을 정하는 한, 자격을 얻지 못하거나 몫을 덜 받는 사람은 어디에나 생긴다. 신생국은 독립 이후에도 승인·재정·공용어 제도를 통해 다른 집단에 불리한 지위를 부여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배제의 재생산으로 부른다. 중앙의 표준어에 맞선 나라가 국어를 정해 언어적 소수자를 만들고, 학살의 기억으로 독립한 나라가 공용어 개헌으로 한국어 화자를 외국어 화자로 강등하고, 법의 공백에서 태어난 나라가 국적을 부여하고 박탈해 원주민을 통제한다. 세 나라를 한자리에 놓는 근거 역시 반복의 문제성이다.

이노우에는 도호쿠의 일본 귀속을, 안정효는 영토 지도의 고정성을, 고종석은 한반도의 국가 구획을 변수로 바꿨다. 그런데도 어느 나라도 승인을 얻는 일과 재원과 부담을 배분하는 일과 공용어를 정하는 일을 피하지 못한다. 제도의 내용은 작품마다 변수지만,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조건은 상수다. 배제의 재생산은 그 상수가 되풀이해 낳는 결과다. 미국이 관여하는 안보 질서와 자본주의 경제망은 세 작품 모두에서 독립을 제약한다.

가장 뚜렷한 사례는 안정효의 『술섬』 결말이다. 황송공화국의 달력은 거꾸로 걸려 있다. 3권에서 대선 토론회는 1962년에 열리는데(3권 13면), 투표일은 도리어 한 해 전인 1961년 1월 1일이다(3권 63면). 가상제국의 황제 환탁은 1956년 7월 4일에 4년 만에 잠에서 깨어나고(3권 180면), 큰우산 운동본부의 투쟁 선언문에는 1952년 8월 12일이라는 날짜가 찍혀 있다(3권 211면). 사건이 앞으로 나아갈수록 연도는 뒤로 물러난다. 그 역행의 끝에서 술섬이 가리왔는 순간, 동쪽 바다 건너 한반도에서 1945년 8월 15일의 만세 소리가 들려온다(3권 287면). 1945년은 해방의 해이면서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한 해

다. 이 결말을 작품 전반의 미국 개입 서사와 함께 읽으면, 독립의 상상이 해방 이후의 지정학적 질서로 되돌아가는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세 작품에서 미국은 지우지 못한 조건이다. 세 작가는 미국을 서로 다른 모습으로 그렸다. 미국은 황송에서는 건국과 정변에 개입하는 행위자로, 제주에서는 승인과 핵 억제에 관여하는 국가로, 키리키리에서는 물자와 제도를 통해 나타난다.

어느 나라도 그 질서 밖에서 존속을 도모하지 못한다. 어떤 가정도 세울 수 있는 소설에서조차 세 작가는 지정학적 조건과 자본주의 체제를 상수로 두었다. 고종석은 금융 중심지 설정으로 국제정치학의 오랜 쟁점 하나를 소설에 옮겨 놓았다.

경제적 상호 의존은 약소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 「우리 고장에선 그렇게 말하지 않아」의 서술자에 따르면, 제주공화국은 수출의 52퍼센트와 수입의 45퍼센트를 대한연방공화국과의 교역에 기댄다. 연방공화국이 손해를 각오하면 제주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진단도 서술자의 것이다(462면). 교역 의존은 공격하는 쪽에도 손실을 입히지만, 같은 의존을 상대국이 압박 수단으로 쓸 수도 있다. 세 작가는 그 안전이 누구의 배제를 대가로 삼는가를 묻는다. 그 물음은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는 지금도 유효하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고종석, 「우리 고장에선 그렇게 말하지 않아」, 『플루트의 골짜기』, 알마, 2013, 452-474면.
- 안정효, 『역사소설 술집』 1-3권, 나남, 2012.
- 井上ひさし, 『吉里吉里人』 上・中・下, 新潮文庫, 2016(改版).

2. 단행본

- 고종석, 『감염된 언어—국어의 변두리를 담은 몇 개의 풍경화』, 개마고원, 2007.
- 북거일,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 문학과지성사, 1998.
- 재정경제부·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동북아 금융 허브 추진전략」, 2003년 12월 11일. <https://bulg.kr/7QOiY4k> (접속일 2026.8.10.)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방안」(공청회 시안), 2008년 1월 30일. <https://bulg.kr/BeMu5f4> (접속일 2026.8.10.)
- 「21世紀日本の構想」懇談会, 『日本のフロンティアは日本の中にある—自立と協治で築く新世紀』, 講談社, 2000. <https://bulg.kr/1GMCDX1> (접속일 2026.8.10.)
- 經濟企画庁 編, 『昭和51年版 經濟白書—新たな發展への基礎がため』, 大蔵省印刷局, 1976.
- 外務省 編, 『わが外交の近況』 第26号(昭和57年版), 大蔵省印刷局, 1982.
- 伊沢修二 著, 小松久夫 記, 『視話応用東北発音矯正法』, 楽石社, 1909.
- 財務省財務総合政策研究所財政史室 編, 『平成財政史—平成元~12年度』 第1巻, 白峰社, 2017.

3. 논문

- 김동현, 「로컬리티의 발견과 내부식민지로서의 ‘제주」,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김태경, 「자본주의 너머를 상상하다—이노우에 히사시 『키리키리인』의 가능성과 한계—」, 『일어일문학연구』 111집, 한국일어일문학회, 2019, 195-212면.
- _____, 「부패하는 권력, 우연성의 정치—이노우에 히사시 『키리키리인』론—」, 『일본연구』 89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21, 125-143면.
- 이경제, 「한국소설에 나타난 베트남전 기억의 변모 양상—안정효의 『하얀전쟁』 개작

- 양상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64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35-69면.
- 임태훈, 「지정학적 SF 연구를 위한 시론」, 『반교어문연구』 63집, 반교어문학회, 2023, 81-118면.
- _____, 「한국 SF가 ‘80년 광주’를 이야기하는 방법」, 『대중서사연구』 30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24, 53-87면.
- _____, 「지정학적 SF와 상상력의 구조 변동: 1987-1994년의 대체역사소설에 관하여」, 『반교어문연구』 68집, 반교어문학회, 2024, 181-222면.
- 加藤千博, 「井上ひさし『吉里吉里人』に見るユートピア文学の伝統—トマス・モアとジョナサン・スウィフトとの比較から」, 『比較文化研究』 128号, 日本比較文化学会, 2017, 49-63면.
- 牛路遥, 「『成る』可能性のない国家—井上ひさし『吉里吉里人』論」, 『立教大学日本文学』 121号, 立教大学日本文学会, 2019, 410-427면.
- 高田知波, 「国家・国民・命がけの『ゲーム』—井上ひさし『吉里吉里人』をめぐって」, 『日本文学』 44巻11号, 日本文学協会, 1995, 47-59면.
- 松崎晴夫, 「文芸時評」, 『文化評論』 247号, 新日本出版社, 1981, 143-152면.
- 前田愛, 「『吉里吉里人』論」, 『國文學—解釈と教材の研究』 27巻4号, 學燈社, 1982, 98-106면.
- 伊藤順一, 「転作の地域間調整と農家経済」, 『農業総合研究』 48巻3号, 農林水産省農業総合研究所, 1994, 1-37면.
- 樋口陽一, 「『講演』ある劇作家と共に〈憲法〉を考える—井上ひさし『吉里吉里人』から『ムサン』まで」, 『早稲田法学』 88巻1号, 早稲田大学法学会, 2013, 255-268면.
- Christopher A. Robins, 「研究発表『吉里吉里人』における国家形成と主体性の喪失」, 『国際日本文学研究集会会誌録』 21号, 国文学研究資料館, 1998, 69-80면.

4. 기타자료

- 김두호, 「생애 최대의 작품 타고 앞둔 소설가 안정효」, 『인터뷰365』, 2008년 10월 24일.

<Abstract>

The “Independent State” as a Thought Experiment and the Conditions of Survival for New States

– Secession Narratives by Inoue Hisashi, Ko Jong-sok,
and Ahn Junghyo

Lim, Taehun

This study compares the institutional constraints that imagined new states face while seeking to survive in three secession narratives: Inoue Hisashi's *Kirikirijin* (1981), Ko Jong-sok's “We Don't Say It That Way in Our Town!” (2008), and Ahn Junghyo's *The Solsom Chronicles* (2012). The three works differ in form and temporal scope but share a starting point: a region breaks away from an existing state and founds a country of its own. This study calls such works secession narratives. The comparison focuses on three institutional domains: external recognition and territorial defense, economic resource mobilization and allocation, and official-language policy. The Kirikiri Republic prevails in debates over international law but disappears after forty-one hours. The Hwangsong Republic obtains U.S. recognition despite uncertain title to its territory but ultimately sinks beneath the sea. The Jeju Republic secures both recognition and governing capacity, becomes a global financial hub and survives for more than two decades. These outcomes do not follow directly from institutional differences. Yet all three states remain tied to external economic networks, and their post-independence institutions place particular groups at a new disadvantage. This study conceptualizes this process as the reproduction of exclusion. The three authors portray

U.S. involvement differently, but none imagines independence outside the U.S.-led geopolitical and economic order. Within that order, the most troubling outcome is not catastrophe but survival.

Key words: geopolitical SF, secession narrative, reproduction of exclusion, official language, Inoue Hisashi, Ko Jong-sok, Ahn Junghyo

투 고 일: 2026년 8월 16일

심 사 일: 2026년 9월 7일

게재확정일: 2026년 9월 10일

수정마감일: 2026년 9월 28일